

주말 없는 선거일…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 “투표 언제 하나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들 간 시행된다. 이번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본투표일을 포함해 대선 투표는 모두 평일에 진행된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30%에 해당하는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근로자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주말 없는 선거일 기간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발표한 ‘21대 조기 대선 노동정책 요구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50.2%는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유급 휴일 의무에서 제외돼 있어 고용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3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0% 수준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3명 중 1명의 근로자들이 참정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선거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날(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과 돌봄노동자, 판매서비스,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교대제나 업무 일정에 묶여 투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투표권은커녕 선거일에 쉬겠다는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요청할 경우 고용주가 정당



제21대 대통령선거사전투표일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다. /뉴시스

선거일은 평일… 30% 근로자는 휴일 보장 안 돼 법 있지만… “투표 시간 달라는 말은 눈치” 참정권은 기본권…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해야

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때문에 근로자가 만약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일인 6월 3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형식적 권리와 현실의 괴리다. 대체 인력이 없는 구조에서 투표권 보장은 고용주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는 유명무실이 된다. 직원 수가 적어 한 명의 부재가 곧 전체 업무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장일수록 투표를 위한 이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극적인 해결책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투표일에 유급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이미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는 이미 수차례 지적됐지만, 법 개정은 매년 ‘영세사업장 경영 부담’이라는 이유로 미뤄져 왔다.

전문가들은 투표권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를 법의 잣대로 삼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국은 소득이 낮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참정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상징하기도 한다”며 “이를 방지하는 것 자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광주 동구창업지원센터 서남동사전투표소를 찾아 김정현 광주시장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등과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광주서 사전투표 이후 총장로 일대서 유세 “민주당, 광주와 호남 위한 정치하고 있는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보수 진영의 합지인 호남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사전투표를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동구창업지원센터 서남동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 김정현 광주시장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송영훈 전 대변인도 사전투표에 동참했다.

투표를 마친 한 전 대표는 “(호남에서) 저는 것을 알면서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며 “호남은 그럼에도 좋은 정치를 위해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호남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말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호남에서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을 응원해 주

길 바란다”고 밝혔다.

투표소에서 이동한 한 전 대표는 이날 낮 12시께 인근 총장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유세 활동을 펼쳤다.

길거리에서 만난 지지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거나 악수를 나누며 거리 유세를 하던 한 대표는 총장로우체국 앞에서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며 “불법 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을 30번 넘게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이번 선거에서 퇴출 시키는 것이 국민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저희는(국민의힘은) 정말 광주와 호남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며 광주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뉴시스

‘화재’ 금호타이어 간 권영국… “손해배상 청구 적극검토”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를 찾아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는 총체적인 노동·환경·재난관리의 실패”라고 규탄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노·사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공장 화재 이후인 지난 21일 금호타이어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는 협력업체는 인력감축을 공고했다”며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5906억원 내고 올해 1분기(1~3월)에도 1448억원 이익을 냈지만 이번 화재 피해를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첫날 광주 방문해 기자회견 “총체적 노동·환경·재난관리의 실패” “주민·상인 등에 대한 보상책 마련해야”

또 “1974년 준공된 공장에 대해 노조는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구했지만 더블스타는 이를 외면했다”면서 “그 이전에는 공장 개발에 따른 이익 극대화를 노린 자본의 욕심이 있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이번 화재를 키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광주송정역 활성화에 따른 공장 이전은 이제 현실이다. 더블스타는 한평빛그린산단으로의 공장 이전 계획을 신속

히 밝혀야 하지만 광주공장 개발 이익 극대화 방안을 관철할 목적에 그라하지 않으면서 고용 불안과 경영 위기를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행정당국을 향해서도 노동자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재 피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자체는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

상되는 지역 주민과 상인 등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 사후 공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화재는 총체적 노동·환경·재난관리 실패다. 지자체는 공장 화재를 계기로 도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재난·대응 시스템 점검에 나서고 지역 노동·안전·환경 전문가와 협력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를 찾아 사전투표를 마쳤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